

045

2017 09·10

건축 도시 정책 동향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 도시재생 / 에너지 / 안전 / 공원 / 주거

건축도시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 추진 동향
- 시범·공모 사업 동향

Special Issue

- 녹색건축 관련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a u r i)

격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7년 9·10월호(Vol.45)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일	2017. 10. 31.
발행인	김대익
ISSN	2288-274X
편집 · 인쇄	하나 (02-2273-7294)
기획	건축 · 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영진, 이은석, 김서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694
이메일	sykim@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auri.policyinfo)’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건축도시분야 Updates

- 8 Hot Topic5
- 10 Hot Topic 포커스 '안전'
- 13 Hot Topic 포커스 '주거'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 18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8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 19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 19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9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 입법예고
- 20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 국토부·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평가 실시
- 21 서울시, '제2회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 시행
- 2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 22 경기도, 대형 건축물 건축·경관 심의 통합
- 22 세종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건축도시분야 계획 추진 동향

- 23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등 과잉 개발계획 관리
- 23 국토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발표
- 24 행안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 24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 25 부산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수립 및 공청회 개최
- 25 대전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 해제·변경
- 26 충청남도,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대응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

건축도시분야 시범·공모 사업 동향

- 27 국토부,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00% 설치 추진
- 27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역 전략사업 5개 선정
- 28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지 19개 선정
- 29 국토부,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 29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 30 교육부, 5개 사립대학에 행복공공기숙사 개관
- 31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32 문체부, 오죽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확충 준공식 개최
- 32 행안부,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개소 선정
- 33 행안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 33 행안부,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대상지 13개소 선정
- 34 문화재청, 지진피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 35 문화재청,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건 선정
- 35 산림청, 올해 산림조경숲 · 경관숲 38개소 조성 추진
- 36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36 서울시, 우리은행과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7 서울시, '다시 · 세운 프로젝트' 완료
- 37 서울시,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 38 부산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38 부산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39 부산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사업' 2개 지역 선정
- 39 부산시,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대상에 4개 구역 선정
- 39 대구시,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 40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논의
- 40 대구시, 한옥 신축 · 수선 공사 보조금 지원
- 41 대구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41 대구시, IoT센서 활용 교량 ·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 42 대구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개 마을 조성 완료
- 42 인천시, 행복주택 1,000세대 건립 후보지로 송림4 주거환경개선 구역 선정
- 42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3 인천시, 전국 최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 도입 시행
- 43 인천시, 국토부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억 4,900만원 확보
- 44 인천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 통과
- 45 대전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 45 대전시, '중앙로프로젝트 사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통과
- 46 광주시, '광주폴리Ⅲ 도심재생 예술프로젝트' 작품 설치
- 46 울산시,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 실시
- 47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 관련 용역 사업 착수
- 47 경기도, 수원 가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완료
- 48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및 사업비 각 100억 원 확보
- 49 강원도, 행안부 '2018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 원주시 선정
- 49 강원도,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에 원주시 2개소 선정 및 국비 580억 확보

Special Issue

단신

- 49 충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최종 선정
- 50 충남도,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 50 충남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670호 선정
- 51 전북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
- 51 전남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6개 사업 최종 선정
- 52 경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4개 사업 최종 선정
- 52 경남도, 2017년도 신규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컨설팅 실시
- 53 경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계획 확장 전 사업대상지 우선 발굴 착수
- 53 경남도,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 추진
- 54 경남도, 행안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 54 세종시, 주민주도형 방식 '조치원역 숲길마을 경관협정사업' 추진

녹색건축 관련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 56 배경 및 목적
- 58 조사개요
- 59 분석 결과 ① - 녹색건축물 보급 수준과 요소별 IPA 분석
- 62 분석 결과 ②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녹색건축 산업 경쟁력 평가
- 64 분석 결과 ③ - 녹색건축물 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 72 정책 제언 ① - 녹색건축 교육 프로그램
- 73 정책 제언 ② - 녹색건축물 교육 대상
- 73 정책 제언 ③ - 녹색건축물 교육 주체
- 74 정책 제언 ④ - 녹색건축물 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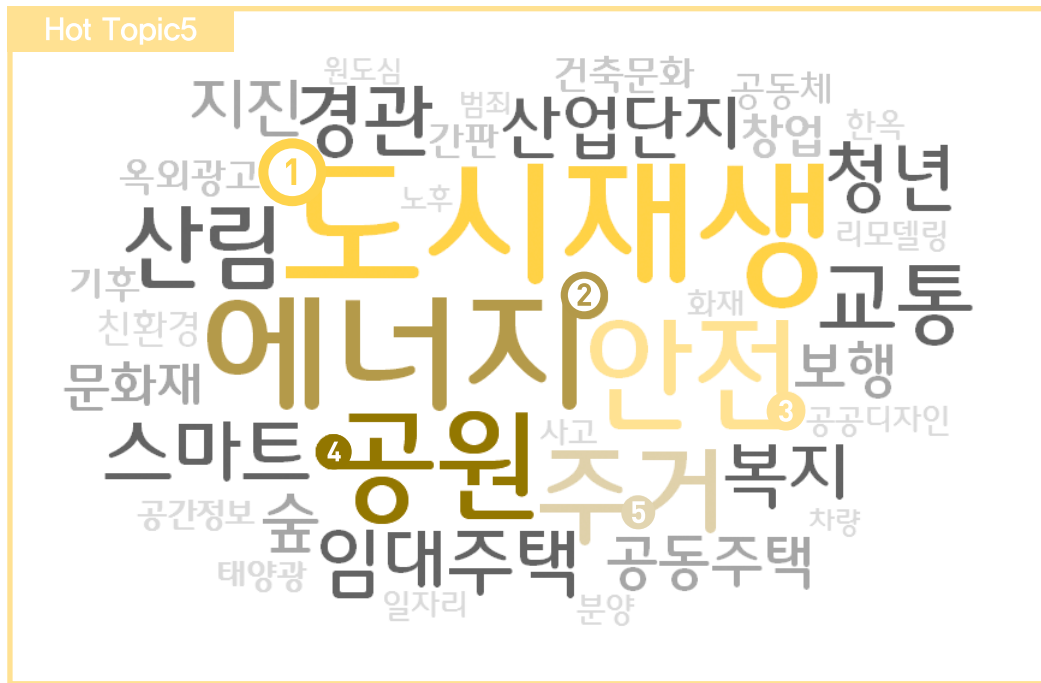
- 75 최신 발간물
- 76 행사 및 홍보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배포한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정책키워드를 추출합니다. 'Hot Topic5'에서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현안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연관키워드를 소개합니다.



건축 · 도시 정책 Hot Topic5



2017년 8월~9월,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는 '안전', '주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건축 · 도시 분야 보도자료(2017년 8월~9월) 468건을 활용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도시재생', '에너지', '안전', '공원', '주거'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나 Hot Topic 5로 선정됐으며, 이어 '산림', '교통', '경관', '스마트', '임대주택', '청년', '복지', '산업단지', '지진', '숲', '공동주택', '보행'이 비교적 높은 빈도수(40이상)로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업', '청년'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키워드가 꾸준히 높은 순위권에 올랐다. Hot Topic 5로 선정된 정책키워드 중 '안전'과 '주거'는 건축 · 도시 분야에서 주목한 새로운 키워드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에서는 ‘안전’,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의 언급빈도가 높게 나타남

중앙부처(176건)와 지자체(292건)의 보도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형태소 분석을 실시했다. 중앙부처 정책키워드 Top5는 ‘안전’, ‘산림’, ‘교통’, ‘숲’, ‘지진’이었으며, 이어 ‘문화재’, ‘임대주택’, ‘도시재생’, ‘에너지’, ‘주거’, ‘공원’, ‘관광’, ‘사고’, ‘공동주택’, ‘재난’, ‘스마트’, ‘경관’, ‘화재’, ‘기후’, ‘분양’, ‘청년’, ‘창업’, ‘보행’, ‘박물관’, ‘차량’이 빈도수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지자체 정책키워드 Top5는 ‘도시재생’, ‘에너지’, ‘공원’, ‘주거’, ‘안전’이었으며, 이어 ‘경관’, ‘스마트’, ‘청년’, ‘임대주택’, ‘산업단지’, ‘옥외광고’, ‘공동체’, ‘보행’, ‘간판’, ‘건축문화’, ‘공동주택’, ‘친환경’, ‘행복마을’, ‘창업’, ‘리모델링’, ‘공간정보’, ‘태양광’, ‘한옥’, ‘기후’, ‘공공디자인’, ‘플랫폼’, ‘노후’, ‘범죄’, ‘소비’, ‘일자리’가 빈도수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중앙부처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안전’의 관련키워드로 ‘안전사고’, ‘교통안전’, ‘안전관리’, ‘국민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 ‘건축안전’, ‘구조안전’, ‘안전사각지대’, ‘재난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의식’ 등이 도출됐고, 지자체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재생’의 관련키워드로 ‘재생사업’, ‘뉴딜사업’, ‘뉴딜정책’, ‘도시재생지원센터’, ‘뉴딜사업추진단’, ‘도시재생특별법’, ‘활성화계획’, ‘공동체센터’, ‘민간전문가’, ‘일자리사업’ 등이 도출됐다.

전체		중앙부처		지자체	
키워드	횟수	키워드	횟수	키워드	횟수
도시재생	150	안전	84	도시재생	125
에너지	144	산림	50	에너지	119
안전	128	교통	47	공원	64
공원	94	숲	42	주거	50
주거	86	지진	39	안전	45

- 분석자료 : 17년 8월~9월 중앙(176건) 및 17개 광역시 도(292건)에서 발표한 건축 도시 분야 보도 자료 468건
- 정책키워드 추출 방법 :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 추출 후, 전처리 작업으로 불용어 제거 및 단어 용례 일치 등 정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정책키워드 순위는 정제된 단어 빈도수를 활용
* TT-IDF값 상위 50% 범위에서 추출한 키워드 사용



- 국토부, '스마트 철도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및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 안전관리, 모니터링, 긴급상황 대응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정책이슈 동향

‘안전’의 연관키워드 분석 결과 ‘재난’, ‘사고’, ‘교통’, ‘보행’, ‘화재’, ‘안전관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보행안전’,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범죄안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키워드가 다수 도출됐으며, 안전관리, 모니터링, 긴급상황 대응 등에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플랫폼 기술개발 등 초기 단계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최근 대형 화재사고, 지진, 흉악 범죄사건 등의 발생이 인명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에서 하위권(34개 국가 중 32위)에 위치해 교통안전 강화 또한 시급하다.

정책시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보행안전 종합대책」에는 ‘30구역(zone30)’,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교통안전교육’,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 ‘안전신문고’, ‘보행환경 인프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옐로카펫·노란발자국’,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휠, 전동킥보드) 안전 통행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2014년 OECD 국가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수’ 순위는 30개국 중 29위로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에 달하며,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보행 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가 시급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광역철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스마트 철도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철도안전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을 위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대구광역시)’, ‘IoT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범사업(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옐로카펫 설치사업(전라북도)’,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경상남도)’,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울산광역시)’ 등의 안전관련 사업 추진 소식을 전했다.

번호	'안전'관련 보도자료	본문 위치
1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9
2	국토부 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평가 실시	21
3	행안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24
4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24
5	국토부,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00% 설치 추진	27
6	행안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33
7	대구시, IoT센서 활용 교량·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41
8	대구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개 마을 조성 완료	42
9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 관련 용역 사업 착수	47
10	전북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	51
11	경남도,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 추진	53
12	보건부,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75
13	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76
14	국토부, '스마트 철도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77
15	과기정통부, 대형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능형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추진	77
16	행안부, 명절연휴 대비 '보행안전 종합대책 및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논의' 회의 개최	77
17	행안부, '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78
18	산림청, 화재에 안전한 고층 목조건축을 위한 목구조 부재 개발	78
19	산림청, 토석채취, 채광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78
20	원안위,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추진현황 보고	78

Hot topic 포커스 '주거'



- 도시재생 뉴딜정책 관련, 국토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정책이슈 동향

‘주거’의 연관키워드 분석 결과 ‘주거환경’, ‘지원’, ‘복지’, ‘임대주택’, ‘청년’, ‘노후’, ‘도시재생’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으며,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정책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으로 추진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국비 지원대상에 부산광역시 4개 구역, 인천광역시 2개 구역이 선정됐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지자체의 주거환경정비 관련 조례 개정,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시행, 민간 사업시행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및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지자체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참여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정책시행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공포했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와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열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지침에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활성화된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의 6년 성과를 공유하는 ‘온동네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현재 77개의 마을로 사업이 확대 추진됐으며, 시는 마을별로 30억 원 내외의 사업비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주택 공급사업자와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대전광역시는 노후 불량주택에 재건축 설계비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주민주도하에 전문가의 기술과 시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광역시는 공공주도로 추진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 ‘LH 노원 천년나무’의 입주소식을 전했으며, 인천광역시는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두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이와 관련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결합개발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역별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나눠 공급해 분양성 및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비를 절감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 시행에 대한 자문과 주거복지정책 관련 심의 활동을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위촉했다.

번호	'주거'관련 보도자료	본문 위치
1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
2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36
3	서울시, 우리은행과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6
4	부산시,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대상에 4개 구역 선정	39
5	대구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41
6	인천시, 행복주택 1,000세대 건립 후보지로 송림4 주거환경개선 구역 선정	42
7	인천시, 전국 최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 도입 시행	43
8	인천시, 국토부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억 4,900만원 확보	43
9	대전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45
10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 운영	76
11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개최	76
12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온동네 어울림한마당' 개최	79
13	세종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81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7년 8월, 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auri.policyinfo/)을 통해 매주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 Review'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경제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주택건설공급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②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인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허용(제22조), ③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제68조) 등에 관한 내용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주거복지기획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의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공포 예정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줄임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다. 주요내용은 ①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 ②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비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②투기과역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등이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공급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②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③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 ⑤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 등이다.

국토부·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평가 실시

화재예방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사용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135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관리할 예정이다.

* 화재안전성능평가 : ①화재 안전시설, ②건축물 마감재료, ③건물의 인명피난능력, ④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평가

서울시, '제2회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 시행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2017.08.



서울특별시시가 '제2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1년 이후 신축,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 한옥이며, 인증된 한옥에 대해서는 인증표식 및 인증서 시상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소규모 수선 지원 등 유지관리 지원을 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7.08.



서울특별시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②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③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④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경기도, 대형 건축물 건축·경관 심의 통합

건축디자인과 2017.08.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관법의 개정으로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시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세종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청춘조치원과 2017.08.



세종특별자치시가 품격있는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제1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대상은 공원녹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중 벤치, 파고라, 화분대, 자전거보관대, 보행등, 수목보호대이며,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미성, 사용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세종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2년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건축도시분야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등 과잉 개발계획 관리

국토정책과, 도시정책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안 상의 목표인구를 30만 명 이상 감축할 것을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발표

녹색도시과 2017.09.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조경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①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②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③조경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④조경전문가 교육체계 구축, ⑤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⑥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폐철도·도로 등 유휴공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조경 전반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행안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안전개선과 20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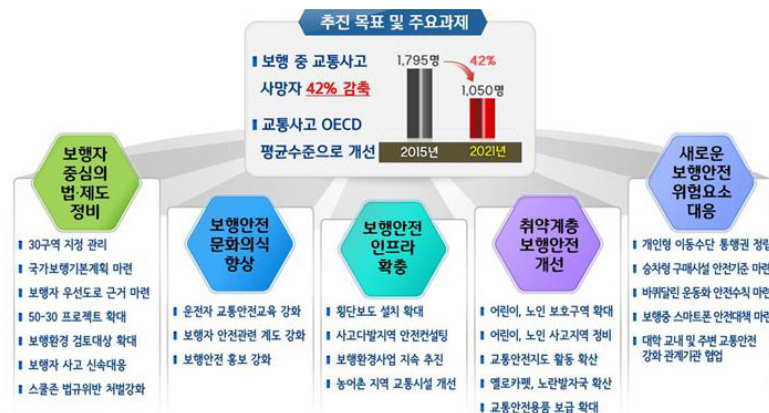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②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③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안전개선과 2017.09.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①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보행안전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③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 ④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 개선, ⑤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다.



보행안전 종합대책' 추진 목표 및 주요과제

부산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수립 및 공청회 개최

도시경관과 2017.09.



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 계획은 2014년 경관법의 개정 이후 재정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①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경관관리의 방향 제시, ②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의 계획 수립, ③생활밀착형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 해제·변경

도시계획과 2017.09.



대전광역시가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는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 중 20개소(도로 10건, 광장 4건, 공원 6건)에 대한 해제·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개소(도로 5건, 광장 1건, 공원 3건)는 올해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도,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대응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

건설정책과 2017.09.



충청남도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지난 4월 착수한 '충남형 도시계획 기준 연구'를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①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 및 국토교통부 수립지침의 문제점 분석, ②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③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④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시설결정 기준 등을 점검한다.

건축도시분야

시범 · 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00% 설치 추진

철도시설안전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광역철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 예방 및 열차 진 · 출입시 승강장 내 바람 · 먼지 · 소음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크린도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승강장 안전문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센서, 구동부 등 부품을 교체하고 출 · 퇴근 시간대에 승강장 안내요원을 배치했으며, 열차 내 화재 등 비상시 승객 탈출통로 확보를 위한 스크린도어 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역 전략사업 5개 선정

지역정책과 2017.08.



국토교통부가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 · 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2017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 ·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발전촉진형(낙후지역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은 조세 ·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지 19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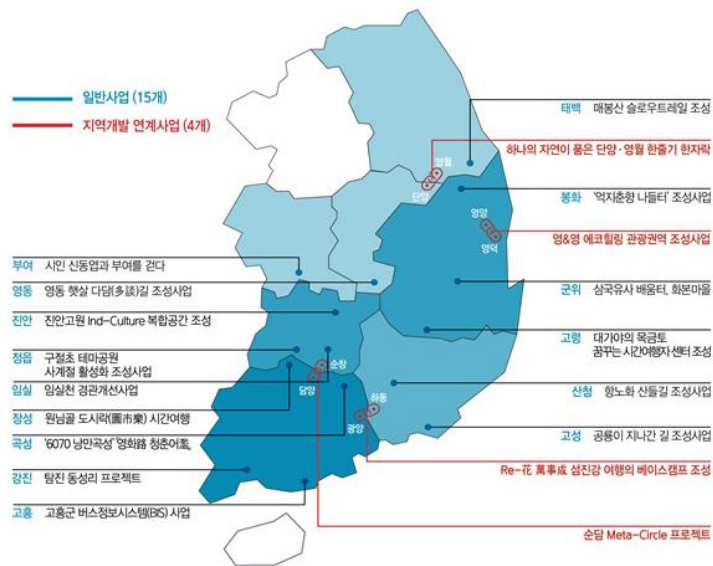
지역정책과 2017.08.

도시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태백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산청 향노화 산들길 조성, 영동 햇살 다담길 조성 등 1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본 사업은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약 30억 내외의 국비(보조율 100%)가 지원된다.

2017년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 최종 지원대상 (19개 사업)



2017년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 최종 지원대상

국토부,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공공주택공급과 2017.08.



국토교통부는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7.09.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9월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①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 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 광역지자체가 자체에서 최대 3곳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서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 10곳을 선정



교육부, 5개 사립대학에 행복공공기숙사 개관

교육시설과 2017.09.

건축정책 완료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과 함께 올해 9월 수도권(경희대, 광운대, 상명대, 신한대) 및 충남권(나사렛대)의 총 5개 사립대학에 2,46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국정과제 중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 공공기금을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우선 입사 기회(15%~30%) 및 기숙사비 인하 대상(3%~5%, 기숙사비 30%~50%)을 확대 제공한다.



나사렛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국어정책과 2017.09.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페이지스(PAGES)’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인천 송도 중앙공원(센트럴 파크) 내 하나의 조형물로 느껴져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내·외부의 곡선 벽체가 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내부 공간은 미래에 진행될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 페이지스(Pages) 조감도

문체부, 오죽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확충 준공식 개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2017.09.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맞이해 내·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오죽한옥마을에 한옥체험시설 14개동을 추가로 확충했다. 이로써 총 34개동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국토부가 주도한 1단계 ‘신한옥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한옥의 고유한 특성(구들 난방, 두벌대기단, 다양한 한옥의 지붕형태 등)을 가미해 건축했다.



강릉 오죽한옥마을 전경

행안부,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개소 선정

생활공간정책과 2017.08.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 등을 개선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걷고 싶은 거리, 기억에 남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 부산 북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광주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인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제주 서귀포시

행안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안전개선과 2017.08.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
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대상지 13개소 선정

생활공간정책과 2017.09.



행정안전부가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대상지 13개소를 선
정했다. 본 사업은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5
년부터 시작돼 현재 18개소가 조성됐다. 대상은 지역공동체 활성
화와 지역 경관개선을 적극 희망하는 지역과 인구가 급격히 위축돼
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주민참여를 높임으로써 침체된 지
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생활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
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지진피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안전기준과 2017.09.

건축정책

진행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경주지진 발생 후 1년 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정문화재 100건(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 또한 ①안전방재연구실 신설, ②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 건립, ③문화재보호법 개정, ④재난대응 지침서 작성·구비, ⑤내진성능 진단기준 및 향상기준 마련, ⑥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시스템 구축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마무리하지 못한 문화재 14건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문화재 복구 모습

문화재청,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건 선정

활용정책과 2017.09.



문화재청은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야행」 22선, 「생생문화재」 130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95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 등 총 277건을 선정했다. 본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재청이 기획한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이에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 전문 인력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림청, 올해 산림조경숲 · 경관숲 38개소 조성 추진

산림청 2017.08.



산림청이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산림조경숲, 산림복합경관숲 38개소를 전국 곳곳에 조성중이다. '산림조경숲'과 '산림복합경관숲'은 산림청 산림경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 · 시각 ·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숲으로 산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사회제도개선과 2017.08.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시설에 법인시설과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되며, 관련 지침 등에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기준’과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서울시, 우리은행과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대주택과 2017.08.



서울특별시와 우리은행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①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②청년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③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다시 · 세운 프로젝트’ 완료

역사도시재생과 2017.09.



서울특별시가 세운상가를 도심 보행 중심축,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재탄생시켰다. 세운상가는 1967년 지어진 국내 최초 주상복합타운으로 한때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불렸지만, 50년이 흘러 낙후되고 침체돼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 세운 프로젝트’는 3년 6개월간 ①다시 걷는 세운(보행 재생), ②다시 찾는 세운(산업 재생), ③다시 웃는 세운(공동체 재생)을 추진했으며, ‘새로운 세운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9월 19일 다시세운광장에서 시민 개장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공중보행교(좌)와 서울옥상(우) 공사 후 모습

서울시,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도로시설과 2017.09.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양 기관의 정보와 행정력을 총 동원해 범죄 취약지역, 범죄다발 지역을 집중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설계부터 주민 참여, 경찰 출동까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정비과 2017.08.



부산광역시는 노후화된 가로구역(1만㎡ 미만)에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를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을 지역현안에 반영하기 위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노후불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생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 주도형 정비 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건설본부 2017.08.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발표했다. 당선작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연계와 입면디자인이 우수하고, 진입광장의 개방성과 다양한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닝별 공간배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다를 향한 열린 계획, 남향 해안가 보행로 조성 등을 설계개념으로, 지하1층, 지상8층, 건축연면적 76,836㎡ 규모로 위판시설, 업무시설 2동, 냉동창고, 오·폐수처리시설 및 약 1,100면의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계획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부산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개 지역 선정

에너지산업과 2017.09.



부산광역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개별지원에서 탈피해 특정지역 또는 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오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태종대 마을 클린에너지 보급사업'이 선정됐다.

부산시,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대상에 4개 구역 선정

도시정비과 2017.09.



부산광역시시는 '2017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 대상으로 4개 구역이 선정됐다. 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지자체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의 참여 속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건축주택과 2017.08.



대구광역시시는 관내 노후아파트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KT의 에너지진단 전문기술 인력 및 최신 진단 장비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약 38%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전기시설 점검을 통해 설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얻었다.

대구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도시정비과 2017.09.



대구광역시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팔달시장 주변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 구역은 대규모 재래시장, 도시철도 역세권, 탁월한 도로교통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비좁고 불량한 가로환경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다.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형평형 위주의 ‘LH 노원 천년나무(단기임대주택 32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사를 착공해 올해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사업시행 후 전경

대구시, IoT센서 활용 교량 ·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안전관리과 2017.09.



대구광역시는 IoT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IoT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의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설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대구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개 마을 조성 완료

안전정책관 2017.09.



대구광역시시는 '안전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귀담아 듣고 경찰, 동 주민센터와 함께 현장을 진단하고, 전문가·주민이 함께 논의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주민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현재 달서구 두류1·2동, 동구 신탄마을, 서구 비산7동 등 3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행복주택 1,000세대 건립 후보지로 송림4 주거환경개선 구역 선정

주거환경과 2017.08.



인천광역시시는 동구 송림4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행복주택 건립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림4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국토교통부의 '2017년 제4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복주택 후보지로 8월 29일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시재생과 2017.09.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30만㎡ 이상 원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주)포스코건설, 지멘스(주)와 '원도심 스마트 시티(캠퍼스) 구축 산·학·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4대 약자 친화형 도시를 건설하고, 공공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으로 IoT 기반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 전국 최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 도입 시행

주거환경과 2017.09.



인천광역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대현 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을 결합·개발한다. 대현학교 뒤 구역에는 분양주택을 배치해 분양성 및 사업성을 개선하고, 송림4구역에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임대주택(행복주택, 영구임대, 공공임대)을 배치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계획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결합개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인천시, 국토부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억 4,900만 원 확보

주거환경과 2017.09.



인천광역시는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대상에 2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24억 4,900만 원을 교부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역은 남동구 간석자유시장과 부평구 동암마을로, 내년 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 통과

도시재생과 2017.09.

도시
정책

진행

인천광역시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중·동구 지역이 지닌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관광 활성화, 교통환경개선 3가지를 목표로 25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구상도

대전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도시정비과 2017.08.

주택 정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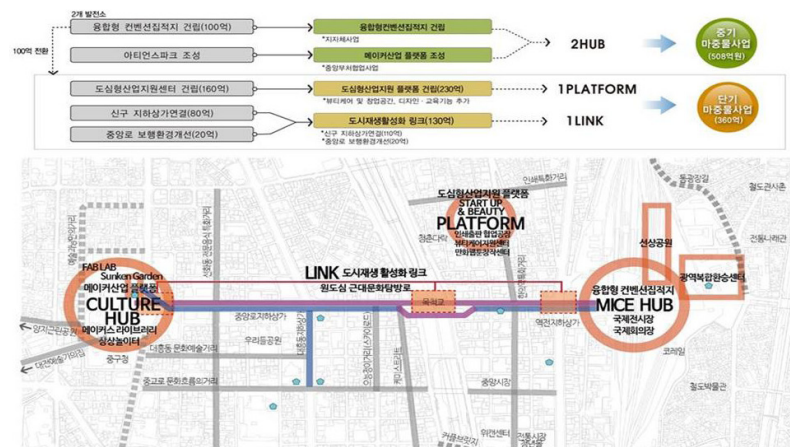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시민공모를 통해 기존 주거지내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에 재건축 설계비(최대 4,200만 원)와 리모델링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재건축 사업은 공유 공간(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전시, '중양로프로젝트 사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통과

도시정비과 2017.09.

도시 정책 진행

대전광역시는 중양로프로젝트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양로프로젝트는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건립', '중양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 '중양로 지하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까지 360억 원(국비 18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양로프로젝트 사업구상도

광주시, '광주폴리Ⅲ 도심재생 예술프로젝트' 작품 설치

도시재생정책과 2017.09.



광주광역시가 30여 개 광주폴리Ⅲ 작품을 도심 곳곳에 설치했다. 광주폴리사업은 공동화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된 도심 재생 예술프로젝트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폴리Ⅲ 사업은 지난 사업에서 미흡했던 실용성과 기능성을 보완해, 청년실업, 청년창업, 공폐가 등 사회적 문제를 식당과 카페라는 테마로 풀어낸 '쿡폴리',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뷰폴리', 초등학생,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들이 통행권과 보행권을 지켜낸 'GD폴리' 등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울산시,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 실시

재난관리과 2017.08.



울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계획이 모든 공공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내진보강사업계획에서 제외됐던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종류, 규모, 용도, 내진보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자체 내진보강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기존 울산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대상 시설은 총 1,084건이며, 현재 550건(내진율 50.7%)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 관련 용역 사업 착수

도시창조과 2017.09.



울산광역시와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안전사고를 행동유도 디자인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방안'과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

경기도, 수원 가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완료

특화산업과 2017.08.



경기도와 수원시는 침체된 수원가구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원가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및 마케팅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개선, 도로변 번호판 표시, 노후된 버스쉘터 보수, 가로변 방송장비 설치, 가구상가 건물 및 간판 띠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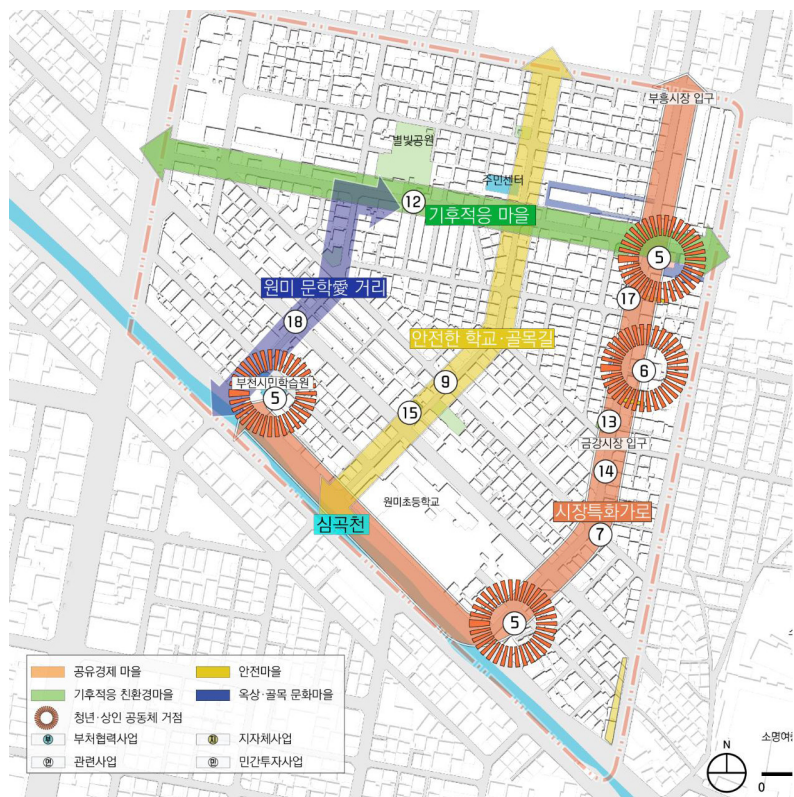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및 사업비 각 100억 원 확보

도시재생과 2017.08.

도시
정책

진행

경기도가 수원시 매산동과 부천시 원미동을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주민소통,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등 거점공간 조성에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경기도만의 핵심가치를 접목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계획안(부천시 원미동)

강원도, 행안부 ‘2018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 원주시 선정

건축과 2017.09.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2018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 원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소외된 소규모 상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간판을 제작·지원한다. 사업지 내 27개소에 1억 원(국비50%, 기금20%, 지방비20%, 자부담10%)을 투입해 오래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개선을 지원한다.

강원도,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에 원주시 2개소 선정 및 국비 580억 확보

건축과 2017.09.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대상에 원주시 2개소 580호가 확정돼 국비 등 총 5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은 남원주 역세권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3개 지구에 1,015호를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최종 선정

균형발전과 2017.08.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2017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대상지에 영동군 ‘영동 햇살 가득 다담(茶談)길 조성 사업’과 단양군·영월군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검증결과를 거쳐 단일 시·군 사업의 경우 국비 20억 원, 지역개발연계 사업의 경우 사업 당 30억 원 이내의 국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충남도,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건축도시과 2017.08.



충청남도가 도내 15년이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내 ①좌변기 주변 안전 손잡이 설치, ②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③현관 센서등 및 안전 손잡이, ④레버형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도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670호 선정

건축도시과 2017.08.



충청남도는 최근 열린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평가 위원회의 심사 결과, 천안 2개(350호), 부여 1개(150호), 청양 1개(170호) 등 총 4개 지구 670호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공공주택 건설·공급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도로, 광장,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공공 시설 확충,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

여성청소년과 2017.09.



전라북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옐로카펫 설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아동안전 공간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전주남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됐으며, 향후 평화동지역 1개소와 완주 17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6개 사업 최종 선정

지역계획과 2017.08.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곡성군의 '6070 낭만곡성 영화路(로), 청춘어濫(탐)' 등 4개, '지역개발 연계 사업'에 담양군 · 순창군의 '순담 Meta-Circle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과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등의 융 · 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고,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광역적 스토리테마를 통해 지역 간 연계발전 방안마련 및 상생의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경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4개 사업 최종 선정

균형발전사업단 2017.08.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영&영 에코 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등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 2017년도 신규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컨설팅 실시

지역공동체과 2017.08.



경상남도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8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곳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에 나선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빈곤층의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안전시설, 재해위험지 정비 등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일자리 등 지역주민의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종합패키지로 지원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도 선정 거창 동촌지구 사업전



2015년도 선정 거창 동촌지구 사업후



거창 동촌지구 사업 전, 후 비교

경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계획 확장 전 사업대상지 우선 발굴 착수

도시계획과 2017.08.

도시
정책

진행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의 공모계획 확정이전부터 사업대상지를 우선 발굴하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 김해 등 8개 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 중에 있고, 41개소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 추진

도로과 2017.09.

도시
정책

안전

진행

경상남도는 도로의 환경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5년간 총 60억 원을 들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터널·교량 등으로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보행안전구역 사업 전, 후 모습

경남도, 행안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지역공동체과 2017.09.



경상남도는 남해군 고현면 독방공원마을과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공동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유휴지에 꽃밭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마을주민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세종시, 주민주도형 방식 ‘조치원역 숲길마을 경관협정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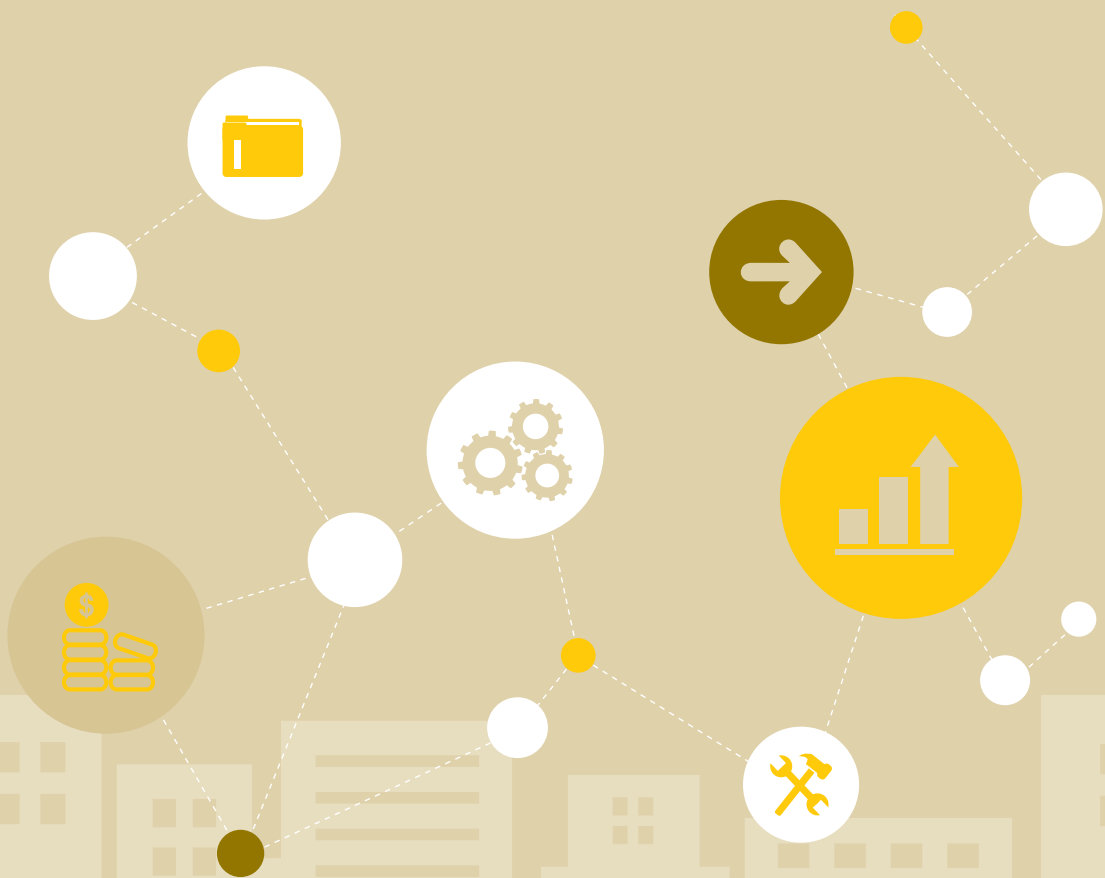
청춘조치원과 2017.08.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하는 ‘조치원역 숲길마을 경관협정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조치원역 주변 으뜸로 400m 구간을 대상으로 11월까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한 가드닝 및 가로 정비,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개선하는 교통체계개선, 청과물거리 쉼터콘크리트 포장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보도변 공유지에 대한 소규모 녹지 조성 등 이다.

Special Issue

이번 'Special Issue'에서는 '녹색건축 관련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수행한 전문가패널 조사·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녹색건축 관련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송유미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건물 부문 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1990~2014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반하는 상태이며, 2016년에는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
-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315백만톤)을 공약했고, 이중 건물 부문 감축목표는 35.8백만톤(전체 감축목표량의 18.1%)*임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6년 12월 6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한국 세계 '기후변화 4대 악당국가'로 등극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 CAT 평가 결과
한때 '모범국'서 한정부 출범 뒤 평가 하락

한국이 국제 기후변화 대응활동 연구기관들로부터 '2016년 기후 악당' 선두 국가로 지목됐다. 기후 악당 국가란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기후변화활동연구소(소장 안병욱)는 최근 지난 4월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인 <클라이밋 송 송>이 기후활동추적(Climatic Action Tracker-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세계 4대 기후 악당의 하나로 꼽았다고 6일 밝혔다. CAT는 기후분석(Climatic Analysis), 에코피스(Ecofys), 새기후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등 3개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해마다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활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된 이유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경쟁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지적됐다.

[한겨레, 2016.11.06]

석탄중독 한국, '위험한' OECD 5관왕

일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작성일: 2017-03-21 카테고리: 사회 | 댓글: 5

좋아요 186개 | 공유하기 | 댓글 1

청년실업,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 수준, 언론 자유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상승했지만, 자살률은 최고이고, 출산율은 최저이며, 65세 이상 빈곤율은 최악입니다.

노동시간은 엄청나지만, 노동자들의 만족감은, '흠 글썽.'인 나라.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런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일 겁니다.

OECD 중 한국의 불명예 1위는 도대체 몇 개?

절망스러운 기록들 위에 또 다른 기록들을 보탠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OECD 중 최악' 타이틀이 몇 개지 더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바로 석탄과 연결돼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

[슬로우뉴스, 2017.03.21]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건축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

-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량의 21%는 건물에서 소비되며, 배출전망치(BAU)의 22%가 건물 부문에 해당

- 정부는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
-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크나 소요 비용은 낮은 부문으로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 함으로써 13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 명의 고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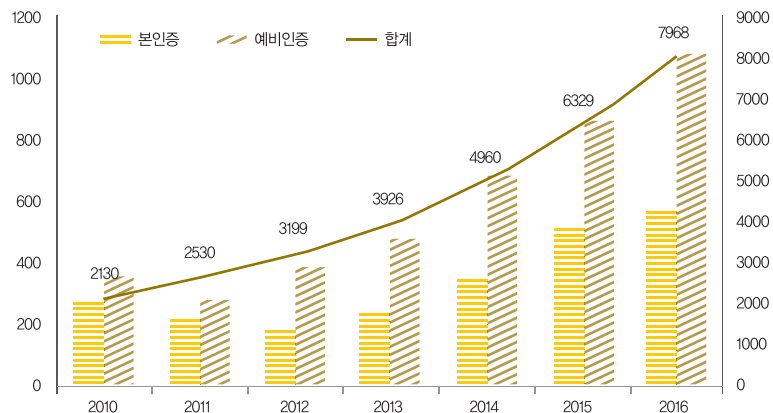
녹색건축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17년) 등 관련 법·제도 제정·시행과 함께 녹색건축물이 급증했고, 이에 대응해 녹색건축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녹색건축물 인증 건수 평균 약 1,500건 (최근 5년간 평균 약 1,000건)

※ 녹색건축인증전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녹색건축물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전문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녹색 건축 인증현황



- 관련 법·제도에서는 녹색건축물 관련 사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녹색건축 수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건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가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고용확대를 권고할 수 있음

-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국토교통 신산업인 제로에너지건축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

조사개요

- (조사 대상) 녹색건축 관련 건축, 도시, 행정 분야 전문가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으며, 계획 및 설계 분야(67명, 56.8%), 시공 및 설비 분야(24명, 20.3%), 건축인증 및 컨설팅 분야(27명, 22.9%) 전문가가 참여

※ 설문 응답자는 산업종사자 34명(28.8%), 연구원 32명(27.1%), 교수 21명(17.8%), 공무원 16명(13.6%), 기타 15명(12.7%)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경력은 15.28년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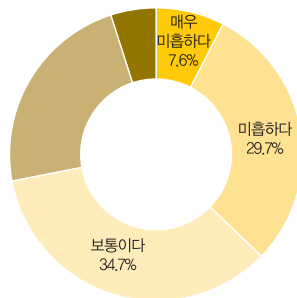
- (조사 방법)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항목별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SPSS 21.0, EXCEL을 사용해 ANOVA, 중요도-성취도 분석(IPA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을 실시
- (조사 내용) ①녹색건축물 보급 수준과 요소별 IPA 분석
②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녹색건축 산업 경쟁력 평가
③녹색건축물 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분석 결과 ① - 녹색건축물 보급 수준과 요소별 IPA 분석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수준은 다소 미흡

- 전체 응답자의 72%가 국내 녹색건축물의 보급 수준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으며, 5점 척도 기준 2.88점 수준
- 녹색건축물 보급 수준에 대한 직종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종사자 집단(3.06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교수 집단(2.67점)이 가장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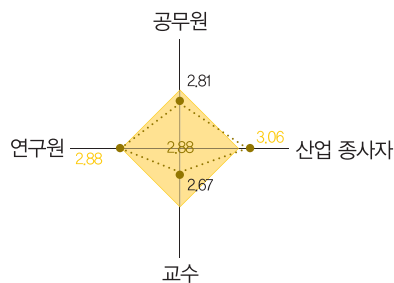
녹색건축물의 보급 수준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미흡하다	9	7.60
미흡하다	35	29.70
보통이다	41	34.70
잘 보급되고 있다	27	22.90
매우 잘 보급되고 있다	6	5.10

직종별 녹색건축물의 보급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5점 척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체	2.88	1.01	-
산업 종사자	3.06	1.01	1
연구원	2.88	0.94	2
공무원	2.81	1.22	3
교수	2.67	1.02	4

녹색건축물 요소 가운데 ‘에너지 효율’, ‘실내 쾌적성’, ‘친환경 재료’가 중요

- 녹색건축물 요소별 중요도 조사결과 에너지효율(4.06점), 실내 쾌적성(3.83점), 친환경 재료(3.70점), 신재생에너지(3.63점) 순으로 조사
- 녹색건축물 요소가 실제 건축물에 반영된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효율(3.52점), 실내 쾌적성(3.17점), 친환경 재료(3.15점), 대지선정 및 디자인(3.03점) 순으로 조사

녹색건축물 요소별 중요도-성과도

(5점 척도)

구분	중요도			성과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에너지효율	4.06	0.96	1	3.52	0.93	1
실내 쾌적성	3.83	0.98	2	3.17	0.83	2
친환경 재료	3.70	0.97	3	3.15	0.95	3
신재생에너지	3.63	1.12	4	3.01	1.00	6
그린 리모델링	3.59	1.02	5	2.70	0.92	8
BEMS	3.53	0.96	6	2.72	0.95	7
생태환경	3.52	0.94	7	3.02	0.84	5
대지선정 및 디자인	3.45	0.93	8	3.03	0.96	4
BIM 설계	2.96	0.97	9	2.48	0.86	9

‘BEMS*’와 ‘그린 리모델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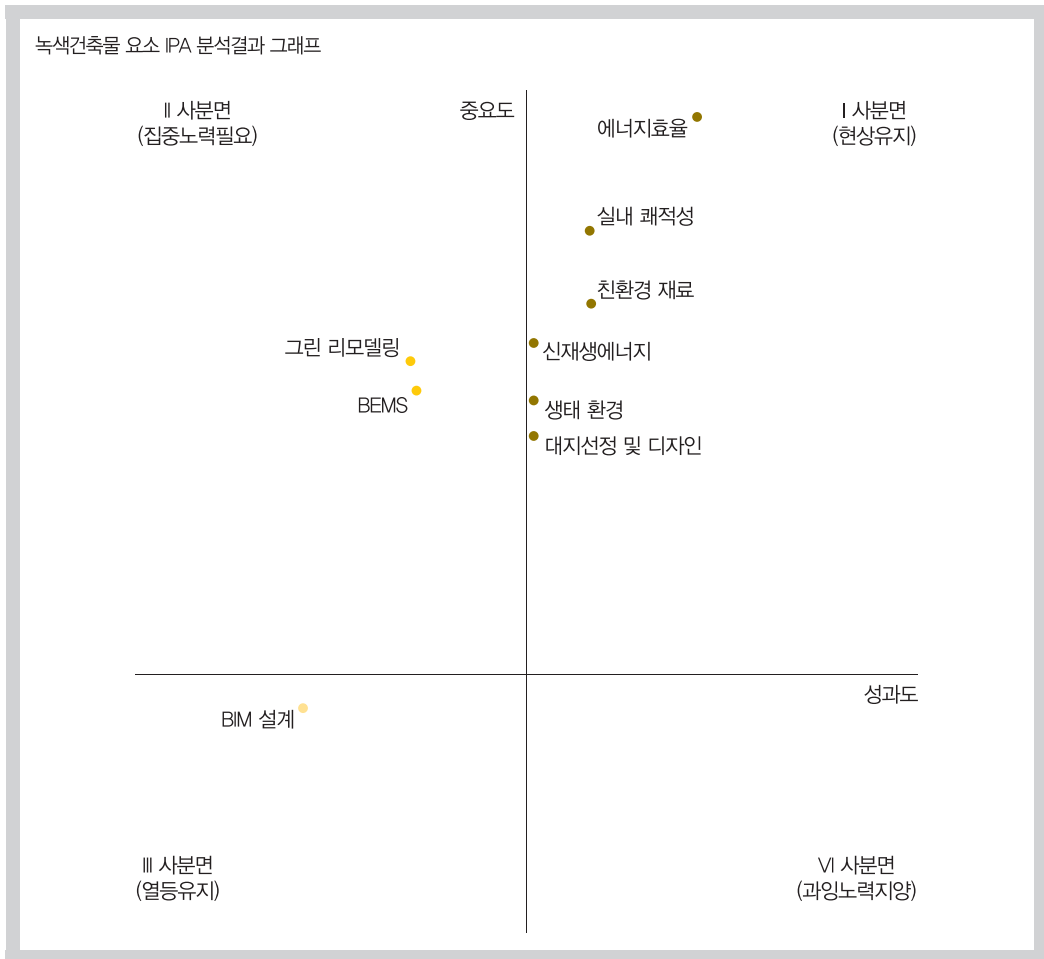
- (현상유지) ‘에너지 효율’, ‘실내 쾌적성’, ‘친환경 재료’, ‘신재생 에너지’, ‘생태환경’, ‘대지선정 및 디자인’은 녹색건축물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집중노력필요) ‘BEMS’와 ‘그린 리모델링’ 부문은 중요도는 높으나 녹색건축물에 적용된 성과가 미비한 요소로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열등순위) ‘BIM 설계’는 중요도와 성과도가 낮은 요소로 현재 수준 이상의 개선 노력 불필요
- (과잉노력지양) 과잉노력지양에 해당하는 녹색건축물 요소는 부재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설기술과 ICT 기술, 에너지기술을 융합 활용해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IPA 분석의 4분면

구분	중요도	성과도	개선방향
현상유지(I 사분면)	높음	높음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집중노력필요(II 사분면)	높음	낮음	현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 시급
열등순위(III 사분면)	낮음	낮음	현재 수준 이상의 개선 노력 불필요
과잉노력지양(IV 사분면)	낮음	높음	다른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녹색건축물 요소 IPA 분석결과 그래프



분석 결과 ②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녹색건축 산업 경쟁력 평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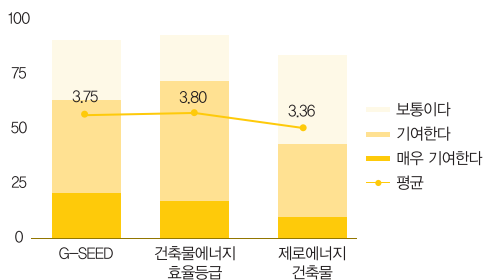
- 녹색건축인증(G-SEED) :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해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해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7등급)으로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기여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3.80점), 녹색건축인증(G-SEED)(3.75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3.36점) 모두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녹색건축인증(G-SEE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는 약 90%의 전문가들이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도는 약 80%의 전문가들이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별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여도 평가결과

(5점 척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80	0.80	1
녹색건축인증(G-SEED)	3.75	0.92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3.36	0.91	3

‘기존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도 적용 강화 필요

- (건축물 유형별) 전체 응답자의 56.8%가 기존 건축물이 신축 건축물에 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강화가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조사한 결과 상업용 건축물(73명, 33.2%), 공동주택(69명, 31.4%), 학교시설(31명, 14.1%) 순으로 조사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강화가 필요한 건축물 유형

건축물 용도	빈도(명)	퍼센트(%)	순위
기존 건물	67	56.8	1
신축 건물	51	43.2	2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강화가 필요한 건축물 용도 (중복응답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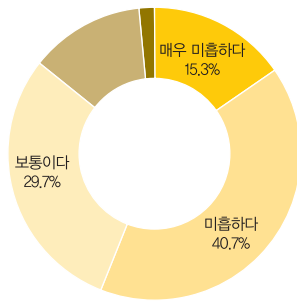
건축물 용도	빈도(명)	퍼센트(%)	순위
상업용 건축물	73	33.2	1
공동주택	69	31.4	2
학교시설	31	14.1	3
판매시설	23	10.5	4
단독주택	20	9.1	5
숙박시설	4	1.8	6

분석 결과 ③ – 녹색건축물 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

- 전체 응답자의 56%가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평균 2.45점)
- 공무원 집단(2.69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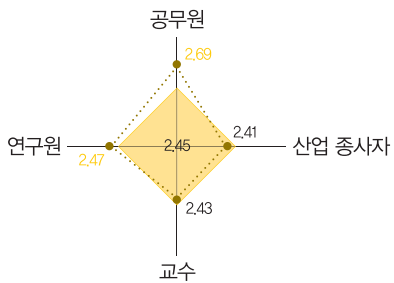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미흡하다	18	15,3
미흡하다	48	40,7
보통이다	35	29,7
잘 보급되고 있다	16	12,7
매우 잘 보급되고 있다	2	1,7

직종별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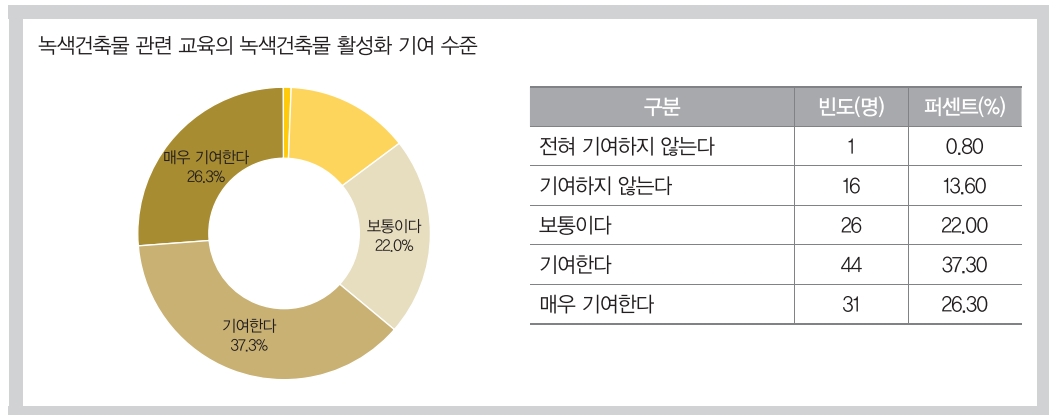
(5점 척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체	2.45	0.96	—
공무원	2.69	1.08	1
연구원	2.47	0.80	2
교수	2.43	0.93	3
산업 종사자	2.41	1.08	4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녹색건축물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

-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은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평균 3.75점)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 계획·설계'에 대한 선제적 교육 필요

- 녹색건축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 분야는 녹색건축 계획·설계(89명, 40.6%), 녹색건축 유지·관리(46명, 21.0%), 녹색건축 소재 개발 및 생산·유통(28명, 12.8%) 순으로 조사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녹색건축물 교육 분야			(중복응답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녹색건축 계획·설계	89	40.6	1
녹색건축 유지·관리	46	21.0	2
녹색건축 소재 개발 및 생산·유통	28	12.8	3
녹색건축 설비	23	10.5	4
녹색건축 시공	21	9.6	5
녹색건축 감리	12	5.5	6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계획·설계 분야 종사자'

-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계획·설계 분야 종사자(80명, 35.9%), 관련 분야 공무원(44명, 19.7%), 시공 분야 전문가(32명, 14.3%) 순으로 조사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필요 대상

(중복응답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계획·설계 분야 종사자	80	35.9	1
관련 분야 공무원	44	19.7	2
시공 분야 종사자	32	14.3	3
일반시민	17	9.6	4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16	7.2	5
감리 분야 종사자	12	5.4	6
컨설팅 분야 종사자	12	5.4	7
학생	9	4.0	8
기타	1	0.4	9

초·중·고등교육에서도 녹색건축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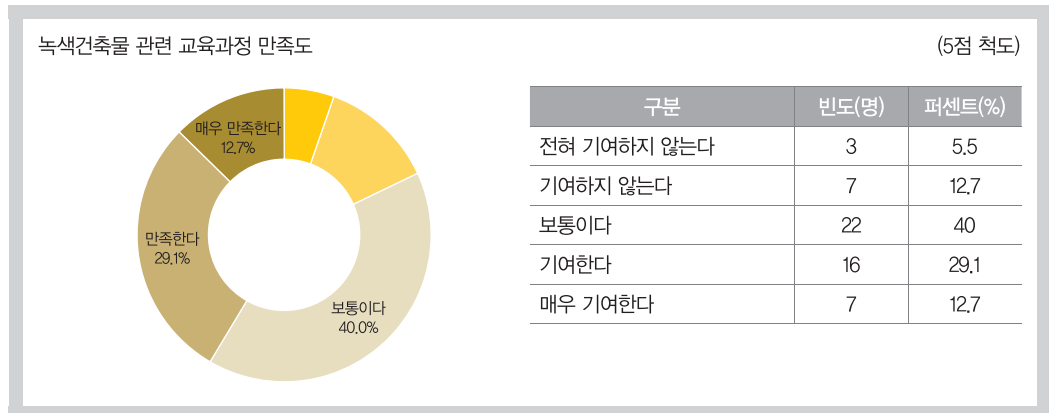
- 적정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31명, 26.3%), 중·고등학교(33명, 28.0%)로 대학 전부터 녹색건축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적정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시기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대학교	48	40.7	1
중·고등학교	33	28.0	2
초등학교	31	26.3	3
대학 이후	5	4.2	4
필요하지 않다	1	0.8	5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음

-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한 55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은 약 42% (평균 3.31점)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과정 계획요소 가운데 ‘강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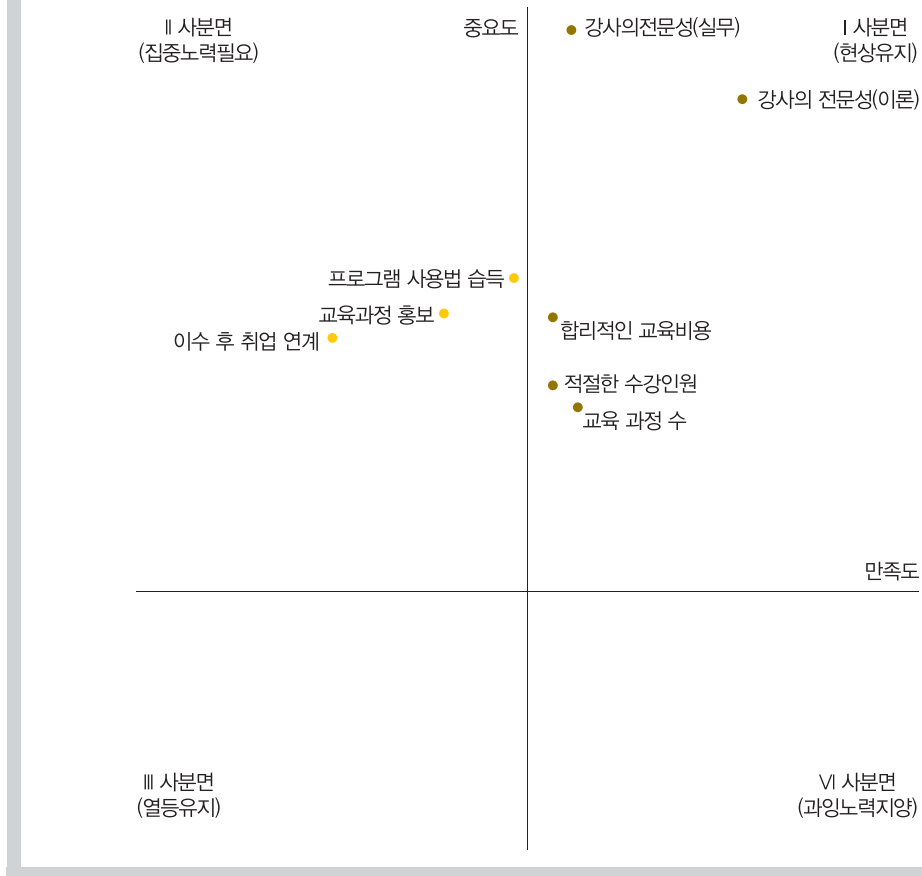
-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과정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강사의 전문성(실무)(4.05점), 강사의 전문성(이론)(3.94점), 프로그램 사용법 습득(3.58점) 순으로 평가
- 실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계획요소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강사의 전문성(이론)(3.44점), 강사의 전문성(실무)(3.29점), 교육과정의 수(3.16점) 순으로 조사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강의내용	강사의 전문성(실무)	4.05	0.87	1	3.29	1.07	2
	강사의 전문성(이론)	3.94	0.81	2	3.44	0.90	1
	프로그램 사용법 습득	3.58	0.85	3	2.95	0.91	6
교육 과정 홍보		3.50	0.99	4	2.76	1.02	7
합리적인 교육비용		3.42	0.90	5	3.09	0.91	4
이수 후 취업 연계		3.42	1.13	6	2.42	0.96	8
적절한 수강인원		3.22	0.83	7	3.09	0.78	4
교육 과정의 수		3.21	0.91	8	3.16	0.90	3

‘프로그램 사용법 습득’, ‘이수 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홍보’ 개선 필요

- (현상유지) ‘교육과정의 수’, ‘강사의 전문성(이론, 실무)’, ‘적절한 수강인원’, ‘합리적인 교육비용’은 녹색건축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잘 반영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집중노력필요) ‘프로그램 사용법 습득’, ‘이수 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홍보’는 현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 마련 시급

[녹색건축물 교육과정 계획요소 IPA 분석결과 그래프]



녹색건축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사의 전문성(실무)’과 ‘교육과정의 수’ 개선

- 다중회귀분석결과 강사의 전문성(실무)과 교육과정의 수는 참가자들의 녹색건축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정(+)의 영향

다중회귀분석 - 녹색건축물 교육과정 만족도를 높이는 계획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녹색건축 교육과정 만족도	상수	.301		1.037	.305	
	강사의 전문성(실무)	.102	.562	5.351	.000	.631
	교육과정의 수	.121	.321	3.061	.003	.631
	R= .799, R2= .638, 수정된 R2= .624 F= 45.868, p= .000, Durbin-Watson= 1.837					

녹색건축물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과정의 홍보 부족’

-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의 홍보 부족(60명, 28.8%),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54명, 26.0%), 수강 후 취업 연계 미흡(39명, 18.8%) 순으로 조사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5점 척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교육 과정의 홍보 부족	60	28.8	1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54	26.0	2
수강 후 취업 연계 미흡	39	18.8	3
교육 과정의 양적 부족	36	17.3	4
교육 수강비용의 부담	11	5.3	5
기타	4	1.9	6
제한된 수강 인원수	3	1.4	7
문제없다	1	0.5	8

녹색건축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건축 관련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필요

- 녹색건축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녹색건축 관련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확대(4.31점), 녹색건축 교육 과정의 질적 개선(4.21점), 녹색건축 교육 과정 홍보 확대(4.03점) 순으로 조사
- 전문가들은 건축주들이 녹색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될 때, 시장과 산업이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건축물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인식

녹색건축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중요도

(5점 척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녹색건축 관련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4.31	0.77	1
녹색건축 교육 과정의 질적 개선	4.21	0.70	2
녹색건축 교육 과정 홍보 확대	4.03	0.66	3
일반시민 대상 녹색건축 교육 확대	3.98	0.87	4
녹색건축 교육 과정 증설	3.91	0.68	5
녹색건축 관련 중·고교 및 대학 교과과정 편성	3.89	0.86	6
취업 가산점 등 녹색건축 전문가 혜택 강화	3.89	0.99	6

정책 제언 ① - 녹색건축 교육 프로그램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그린리모델링 분야 집중 노력 필요

- 녹색건축물 요소 가운데 중요도가 높으나 실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받은 BEMS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필요
- BEMS와 그린리모델링 관련 녹색건축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필요

기존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강화

- 신규 건축물 초점을 둔 현재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강화 필요
- 이를 반영한 관련 녹색건축물 교육 프로그램 확충 필요

녹색건축물 관련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프로그램 사용법 습득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부족한 분야이므로 현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정책 제언 ② - 녹색건축물 교육 대상

계획·설계 분야 종사자 대상 녹색건축물 교육 확대 추진 필요

- 녹색건축물 교육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 수준은 미흡한 수준
- 건축 계획·설계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 계획·설계, 유지·관리 관련 교육의 확대 추진 필요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건축 콘텐츠 개발 필요

- 녹색건축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건축학과 교육과정에 녹색건축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마련이 필요
- 초·중·고등학생이 에너지절약 및 환경윤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필요성 및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마련 필요

정책 제언 ③ - 녹색건축물 교육 주체

전문성 있는 강사진 풀(pool)의 확충·관리 필요

- 녹색건축물 관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무와 이론 측면에서의 전문성 있는 강사진 구성 여부
- 녹색건축센터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전문성 있는 강사진 풀을 구축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진의 교육 프로그램 운용 사례 관리 필요

정책 제언 ④ - 녹색건축물 교육 활성화

녹색건축물 교육 과정의 홍보 채널 확대 필요

- 녹색건축물 교육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유관기관(중앙 부처, 지자체, 학회, 협회 등) 홈페이지, 관련 분야 매거진, 신문 또는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필요

녹색건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필요

- 녹색건축물 교육은 결국 녹색건축 수요가 확대될 때 가능해지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얻게 되는 행정적·재정적 혜택의 확대가 필요

최신 발간물

국토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배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

(담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부,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예방 및 재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 배포

(담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부, '좌충우돌 환경가족의 세상과 통하는 환경이야기 45' 발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생활 밀착형 환경정책 45가지를 알기 쉽게 소개한 '좌충우돌 환경가족의 세상과 통하는 환경이야기 45'를 출간

(담당)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2017 서울도시건축주간' 안내서 배포

서울특별시시는 9월 첫 주간을 '2017 서울도시건축주간'으로 선정하고, 기간 중 개최하는 4가지 건축행사 등 각종 행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

(담당)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전근대 서울의 주택'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선사시대와 고려시대 서울에 남아있는 주거유적, 전통 한옥의 유래, 조선시대 서울 한옥의 특성,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옥, 그리고 이러한 한옥들이 근대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보여주는 '전근대 서울의 주택' 발간

(담당) 서울특별시 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방안' 보고서 발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녹색건축의 인증 및 시범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녹색건축의 조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방안' 보고서 발표

(담당)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도,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 발간

경기도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토지 관련 50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사업 추진현황과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수록한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
(담당)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행사 및 홍보

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2017.08.28.~

국토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
(담당)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 운영

2017.08.28.~

국토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운영
(담당)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개최

2017.09.10.

국토교통부는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준 1,408명 가운데 토크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
(담당)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국토부, '미래건축포럼' 개최

2017.09.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건축포럼' 개최
(담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부, ‘스마트 철도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7.09.25.~2017.10.23

국토부는 철도안전기술과 관련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스마트 철도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담당)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과기정통부, 대형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능형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추진

2017.09.25.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을 2017년도 ‘재난 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인 ‘지능형 위험분석 피해예측 기반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선정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문체부, 광주폴리Ⅲ사업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

2017.09.05.

문체부는 구도심 재생과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음식’이라는 플랫폼을 제시한 ‘광주폴리Ⅲ 사업’을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체부,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개최

2017.09.01.

문체부는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공모, 선정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개최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체부, ‘2017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

2017.09.05.~2017.09.09.

문체부와 한국건축사협회는 ‘통합의 건축’을 주제로 건축 전시와 세미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는 ‘2017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행안부, 명절연휴 대비 ‘보행안전 종합대책 및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논의’ 회의 개최

2017.09.14.

정부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보행안전 종합대책,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를 논의
(담당)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행안부, '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2017.09.25.~2017.10.27.

행안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담당)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산림청, 도시숲 조사 결과 가로수 그늘 2.5℃, 교통섬 나무 그늘 4.5℃ 온도 저감 효과 확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열화상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교통섬 나무 그늘은 평균 4.5℃, 가로수는 평균 2.3℃에서 2.7℃의 온도저감 효과를 확인, 대규모 도시숲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열섬을 환경친화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대책이라고 설명

(담당)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화재에 안전한 고층 목조건축을 위한 목구조 부재 개발

2017.08.16.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건축법상 고층 목조건축의 필수조건인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집성판(CLT)으로 구성된 바닥체와 벽체(2종) 등 총 5종의 목구조 부재를 개발

(담당) 산림청

산림청, 토석채취, 채광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2017.09.14.~2017.09.15.

산림청은 충청북도 내 토석채취, 채광지에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토석채취 허가지에 경계표시, 완충구역 설정, 재해예방·안전시설 설치, 채석장비 점검, 복구설계 기준 등에 대한 주수여부 지도점검 실시

(담당) 산림청

원안위,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추진현황 보고

2017.09.1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극한 지진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

(담당)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서울시, 2017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한내 지혜의 숲' 선정

서울시는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인근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내근린공원을 활성화한 '한내 지혜의 숲'을 '2017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으로 선정

(담당)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시,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2017.09.03.~2017.09.10.

‘도시의 훈’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 전시, 대중강연, 공개토론회, 건축문화투어 등 총 13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제건축연맹(UIA) 세계건축대회’가 코엑스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담당) 주택건축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온동네 어울림한마당' 개최

2017.09.22.~2017.09.23.

서울시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6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온동네 어울림한마당’이 주민대표, 마을활동가 등 마을 주민의 주도로 기획·개최
(담당)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부산시,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발표

우수작품전시 2017.09.01.~2017.09.17.

부산시는 ‘우리 동네(부산) 바꾸기’를 주제로, 배려하는 디자인, 문제해결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로 진행된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담당)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부산시, '2017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 선정

부산시는 매년 부산에 소재한 완공 건축물 중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위상을 높여줄 건축물을 발굴해온 ‘부산다운 건축상’의 일반, 공공분야에 대한 수상작을 선정
(담당)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시, '2017 대구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2017.09.20.

대구시는 ‘대구시에서 향후 10년 간 중점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도시재생 계획(안)을 공모한 ‘2017 대구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담당)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인천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시상식 2017.08.29.

인천시는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의 도심내 핵심공원인 중앙공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우수 기본계획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 공모전’ 수상작 선정
(담당)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형 공공디자인 사업'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최우수상 수상
(담당)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대전시, '제19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선정

2017.09.21.

대전시는 지역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시상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19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선정
(담당)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울산시, '제17회 울산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식 개최

시상식 2017.09.26.

우수작품 전시 2017.09.26.~2017.09.28.

울산시는 뛰어난 예술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울산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우수 옥외광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제17회 울산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식 개최
(담당)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전남도, '제2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수상작 선정

2017.09.25.

전남도는 전남의 친환경 자원과 디자인을 융합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차세대 디자인산업을 이끌 학생들과 전문가의 참여 장인 '제2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의 수상작 선정
(담당) 전라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

경북도, '제22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상식 2017.09.20.

출품작 전시 2017.09.20.~2017.09.22.

경북도는 우수한 작품을 발굴·보급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와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2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 개최
(담당)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세종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2017.09.21.

세종시는 주거복지 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 주거복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과 원도심 및 신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논의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제주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수상작품 전시 2017.09.26.~2017.09.28.

제주도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고 도민의 간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201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의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 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